상반기 임금체불 390억 적발 "노동약자 위한 근로감독 강화"

1.2만여개 사업장서 3.6만건 적발
근로조건 명시, 금품체불 등 위반
건설현장 억대 불법하도급 문제도

전남 장성군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응해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뉴시스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1만2000여 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중 272억원을 청산한 가운데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주요 위반 현황은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107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 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특성을 고려해 노무관리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대형 카페 및 음식점 112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61명의 임금 및 수당 4억6500만원의 체불을 확인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 점검·분석
평시에도 핵심자원 비축 가능해져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핵심광물 등의 분야별 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분석하게 된다. 또 평시에도 핵심자원을 적정량 비축하고, 자원안보 위기시엔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자원안보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이다.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와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다.

산업부는 평시 핵심자원 비축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체제로, 위기 발생이나 발생 우려시엔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 비축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IAT, 'K-태그' 10주년 유럽 총회 개최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태그는 세계 22개국 618명의 재외 한인 공학자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2014년 설립했다.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한만욱 재오스트리아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비롯해 K-태그 유럽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유럽 8개국과 양자간 공동연구를 운영중이며,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유레카에도 2009년부터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계란 깜깜이 거래, 60년만에 관행 없앤다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의무화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조사·발표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미령 장관, 상추·배 주산지 찾아 수급 점검

논산 찾아 상추 심기 진행상황 점검
나주 방문해 배 품목 수급안정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전남 나주를 방문해 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1일 오후 침수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남 논산을 찾아 상추 생육 및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논산은 이달 초·중순 쏟아진 호우로 관내 농산물 재배 면적의 35%(258헥타르·ha)가량이 침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민·관·군의 공동 노력으로 논산, (전북) 익산 등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7월 중순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급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최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산지저장 및 유통시설에서의 꾸준한 출하를 위해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혜택 확대

추가지원 횟수제한 폐지 등 지원 강화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우선, 지난 5월 개정된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이제는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대환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사진 뉴시스

▲오슬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기체결함으로 인천 회항

▲'유흥가 파고든 마약' 호스트바 접객원·손님 무더기 송치

▲"남친 생겼냐" 전처와 그 애인 둔기 폭행…구속영장 신청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차피해 극심

▲민주노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인사 참사" /사진 뉴시스